

## 윤석열 당선인의 공약 의미 및 기업 영향 분석



2022.3.11.(금)

# 목 차

<b>Summary</b> 윤석열 당선인 주요 공약.....	5
<b>I. 부동산</b> .....	8
① 주택공급 / 재개발·재건축 .....	8
② 부동산 세제.....	11
③ 대출규제 / 외국인 투기 규제 .....	13
④ 주택임대사업.....	15
<b>II. 경제·금융</b> .....	17
① 규제혁파 및 기업환경 개선 .....	17
② 자본시장 선진화.....	19
③ 중소·벤처기업 육성 .....	22
④ 주요 산업별 육성 정책 .....	24
⑤ 지역발전.....	26
<b>III. 디지털 경제</b> .....	29
① 디지털 금융의 혁신과 안정 .....	29
② 디지털 자산.....	30
③ 플랫폼 정책.....	34
<b>IV. 에너지·환경 (탄소중립)</b> .....	36
① 탈원전 정책 폐기(復원전 정책) .....	36
② 탄소중립 및 기후위기대응 .....	38
<b>V. 노동</b> .....	40
① 공정경쟁 환경 확립 및 양질의 일자리 창출 .....	40
② 고용혁신·노동이사제·최저임금 .....	41
③ 산업안전 .....	44

<b>VI. 법조개혁</b> .....	46
① 법원.....	46
② 검찰.....	47
<b>VII. 공공개혁</b> .....	49
① 정부조직개편.....	49
<b>VIII. 민생</b> .....	51
① 소상공인·자영업자.....	51
② 감염병 대응체계 강화.....	55
③ 공정사회.....	57

■ 법무법인 율촌 웨비나

- 주제: 『신정부 출범에 따른 정책방향 변화와 기업의 대응방안』
- 일시: 3월 16일(수) 오후 3시~
- 주제 및 발표자 (각 주제별 15~20분)

Session	주제 및 발표자
Intro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정부 정책방향 전망</li> </ul> 윤상직 고문
Session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금융 및 디지털 신산업 분야 관련 정책 방향</li> </ul> 김시목, 허진용, 김익현, 윤종욱 변호사
Session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디지털경제에서의 공정경쟁 관련 정책방향</li> </ul> 신영선 고문, 한승혁 변호사
Session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ICT, 미디어, 콘텐츠 관련 정책방향</li> </ul> 손도일, 구민승 변호사
Session 4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환경에너지 관련 정책방향</li> </ul> 손금주, 김홍, 윤용희 변호사
Session 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동산개발 및 세제 관련 정책방향</li> </ul> 이강만 변호사, 장재형 세무사
Session 6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노동/중대재해 관련 정책방향</li> </ul> 박재우 변호사

분야	구분	주요 내용
I. 부동산	주택공급/ 재개발·재건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재개발·재건축 규제완화, 도심 복합개발 통해 임기 내 250만호 주택 공급</li> <li>- 신도시 재정비사업 촉진 특별법 제정으로 1기 신도시 순환개발 추진</li> </ul>
	부동산 세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정시장가액비율 인하를 통해 공시가격을 2020년 수준으로 환원</li> <li>- 종부세와 재산세 통합,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율 적용 유예 추진</li> </ul>
	대출규제 /외국인 투기 규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최초 주택 구입 시 LTV 상한 80% 적용 및 LTV 상한 70% 단일화</li> <li>- 비거주 외국인 주택거래 허가제 도입</li> </ul>
	주택임대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임대사업자 규제 완화 및 등록임대사업자 세제혜택 제공</li> <li>- 민간임대주택 활성화 및 임대차사업법 재개정</li> </ul>
II. 경제· 금융	규제혁파 및 기업환경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규제개혁 전담기구를 통한 규제혁신과 Positive 규제를 Negative 규제로 전환</li> <li>- 기업 경제 관련 법령상 특수관계인 제도 운용의 합리적 개선, 선진 경영권 방어 수단 도입 등 기업 친화정책 추진</li> </ul>
	자본시장 선진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개인투자자에 대한 세제 지원 강화</li> <li>- 주식물적분할 요건 강화 및 주주 보호대책 제도화</li> </ul>
	중소·벤처기업 육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다양한 정책적 지원을 통한 중소·벤처기업 육성</li> </ul>
	주요 산업별 육성 정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반도체, 해운·조선, 항공·우주, 게임 산업 등에 지원 정책과 동시에 규제 등 추진</li> </ul>
	지역발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5대 초광역 메가시티를 형성하고 과학기술과 문화를 접목하여 국토를 관리</li> </ul>

분야	구분	주요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권역별 신산업 분야 지원을 중심으로 글로벌 혁신 특구 조성</li> </ul>
<b>Ⅲ. 디지털 경제</b>	디지털 금융의 혁신과 안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빅테크 금융업 규율체계정비</li> <li>- AI-데이터 거버넌스 및 보안 강화 등 디지털 혁신금융 생태계 조성</li> </ul>
	디지털 자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상화폐 투자 수익 비과세 및 디지털 자산 기본법 제정등을 통한 디지털 자산 규율</li> <li>- ICO 허용, NFT활성화, 메타버스 관련 법제 화 등 디지털 자산시장 육성 및 지원</li> </ul>
	플랫폼 정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온라인 플랫폼과 지역상권의 Win-Win을 위해 상생형 지역유통발전기금 도입 추진</li> <li>- 플랫폼 자율규제기구 수립 및 플랫폼 내 자율분쟁조정위원회 설치 유도</li> </ul>
<b>Ⅳ. 에너지·환경 (탄소중립)</b>	원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탈원전 정책 폐기 및 원전산업 활성화</li> </ul>
	환경 및 탄소중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전면 수정을 위해 공론화를 통해 확정할 방침</li> <li>- 탄소저감 R&amp;D 투자 확대 및 기후위기 대응 지원 강화</li> </ul>
<b>Ⅴ. 노동</b>	일자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정경쟁 환경 구축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 확보</li> <li>- 자영업자 및 플랫폼 노동자 관련 지원확대</li> <li>- 원자력 및 신재생 에너지 등 첨단산업 관련 일자리 확대</li> </ul>
	산업재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산업재해 취약부문 예방 강화</li> <li>-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개정을 통한 선제적 예방조치 강화</li> </ul>
<b>Ⅵ. 법조개혁</b>	법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통합가정법원, 해사전문법원 설치</li> <li>- 통합행정심판원 창설</li> </ul>
	검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법무부장관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해 검찰의 중립성과 정치적 독립성 확보</li> </ul>

분야	구분	주요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수처의 고위공직자 부패사건 수사에 대한 우월적, 독점적 지위 규정 폐지</li> </ul>
<b>Ⅶ. 공공개혁</b>	정부조직개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통령실을 슬림화하고 전략조직으로 개편</li> <li>- 여성가족부를 폐지하고 다양한 사회적 문제에 대응하는 별도 부처 신설</li> <li>- 디지털 경제 지원을 위해 대통령 직속 민관 과학기술 위원회, 정부 디지털 규제 철폐 전담기구를 신설</li> <li>- 3년 내 디지털 플랫폼 정부를 구성하고 수출가능한 행정용 AI 시스템 개발</li> </ul>
<b>Ⅷ. 민생</b>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살리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상공인·자영업자 코로나19 손실보상</li> <li>- 임대료 나눔제 추진</li> <li>- 관광업계 피해 회복 적극 지원</li> </ul>
	감염병 대응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코로나19 대응체계 집권 100일내 전면 개편</li> <li>- 공공정책수가 적용 등 필수의료 국가책임 강화</li> </ul>
	공정사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하면서 공부할 수 있는 미래형 로스쿨 도입</li> <li>- 시민단체 공금융용 및 회계부정 방지</li> <li>- 공정거래 관련 법 집행체계 개선</li> <li>- 납품단가 제도 개선 및 제값 받는 환경 조성</li> </ul>

## ① 주택공급 / 재개발·재건축

## ○ 재건축·재개발 규제완화, 도심·역세권 복합개발 등을 통해 5년간 250만호 이상 공급

- 재건축 정밀안전진단 기준 및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규제 완화, 분양가 규제 합리화 등을 통해 수요에 부응하는 주택공급에 주력
- 주택법과 별도로 '리모델링 추진법'을 제정하고 리모델링 수직수평 증축 기준 정비. 안전성 검토 과정에 국토부 산하기관 외에 민간참여 확대
- 사업성이 낮은 지역에 대해 공공 참여 재개발을 추진하고 과도한 기반 시설 기부채납 방지를 위한 운영기준 마련

## &lt; 윤석열 당선자의 주택공급 공약 &gt;

정책	공급규모	세부 추진 방안
재건축·재개발	47만호 (수도권 30.5만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30년 이상 노후 공동주택 정밀안전진단 면제 추진</li> <li>▪ 구조안전성 가중치 하향(50%→30%), 설비노후도(25%→30%) 및 주거환경(15%→30%) 가중치 상향</li> <li>▪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부담금 부과 기준 금액 상향, 1주택 장기보유자 감면 등</li> </ul>
도심역세권 복합개발	20만호 (수도권 13만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도심복합개발 혁신지구 제도를 도입하여 도심지역, 역세권, 준공업지역 등 복합개발</li> </ul>
국공유지·차량기지 복합개발	18만호 (수도권 14만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차량기지와 지상 전철부지, 미활용 국공유지를 복합 개발</li> </ul>
소규모 정비사업	10만호 (수도권 6.5만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반시설 설치, 용적률 인센티브 등을 통한 소규모 주택 공급</li> </ul>
공공택지	142만호 (수도권 74만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개발중인 공공택지 및 GTX노선상의 역세권 콤팩트시티 건설 추진</li> </ul>
기타	13만호 (수도권 12만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울 상생주택, 매입약정 민간개발 등</li> </ul>



○ 수도권 1기 신도시 재정비사업을 통해 10만호 이상 주택 추가 공급 추진

- '1기 신도시 재정비사업 촉진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인허가 절차 간소화, 안전진단 제도 규제 완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완화, 토지 용도 변경 및 용적률 상향 등 추진
- 3기 신도시와 중소규모 공공택지개발사업지구에 이주 전용단지를 마련하고 1기 신도시 순환개발을 추진하여 주택가격 상승과 전세난을 억제

▶ 당선인의 관련 comment

분야	세부 내용
주택 공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u>기본적으로 서울에 주택공급이 늘지를 못했고.</u> 그리고 집값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 수요공급곡선하고 다르다. 가격이 낮더라도 일반상품은 가격이 낮으면 수요가 커진다. 집은 가격이 오를 것 같을 때 비싸도 수요가 늘어난다. 그래서 <u>정부가 계속적으로 주택을 공급한다는 그 신호를 시장에 보낼 때 그 주택수요가 좀 진정이 되면서 가격이 안정되는 거다</u> (2022.2.3, 지상파 방송3사 주최 TV토론회)</li> <li>▪ 임기 5년 동안 <u>수도권 130만호를 비롯해 전국 250만호 주택을 신규 공급</u>하겠다. <u>합리적 세제개편과 규제완화</u>를 통해 누구나 열심히 일하면 내 집 마련이 가능하도록 하겠다(3.3일, KBS-TV조선 방송연설)</li> <li>▪ 자가를 소유할 수 있도록 <u>집도 많이 짓고 양도소득세 낮춰서 매물 많이 나오게 만들어서 국민 다수가 자가 보유자가 되게 만드는 정책</u>이 국민 의힘 정책이다(2022.3.6, 서울 중구 유세)</li> </ul>
재건축·재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u>박원순 전 서울시장</u>은 오세훈 전임 시장부터 추진된 서울시 신규주택을 위한 <u>재건축·재개발을 모두 틀어막았다.</u> 집 팔고 퇴직한 분들이 서울 근교로 이사하면서 차액을 보려 하면 <u>양도소득세를 엄청 때린다.</u> 어떻게 하다 보면 집이 몇 채 더 있을 수도 있는데 <u>다주택자를 범죄자 취급한다</u>(2022.3.6, 서울 강동구/중구 유세)</li> <li>▪ 우리 국민의힘은 집값이 안 오르도록 열심히 붙들어 매고 <u>부족하면 또 재건축 재개발할 수 있게 허용하는 정권</u>이라는 뜻이다. 그러면 세금 많이 안 오른다. 그러면 임대료, 전세값 모두 안 오르죠. 그러면 모든 국민에 도움되는 거 아닌가 (2022.3.6, 서울 강동구/중구 유세)</li> </ul>

▶ 이재명 후보의 공통공약	
구분	세부 내용
주택공급, 재개발·재건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공주택 공급 확대,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 등을 통해 총 311만호 이상 보급</li> <li>▪ 재개발·재건축 신속협약제 도입 및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개선, 용적률 500% 상향 및 4종 주거지역 신설, 리모델링 특별법 제정</li> <li>▪ 서울 신규택지 28만 가구 공급. 서울 재정비(재개발·재건축과 리모델링 규제완화, 노후 영구임대단지 재건축) 20만 가구 공급</li> </ul>

▶ 시사점 및 업계 영향

- 부동산 및 관련 세제 공약은 재산권 침해와 밀접한 영역으로 법률 개정이 필요한 공약과 법률 개정없이 정부 정책의지로 추진 가능한 공약이 혼용되어 있는 대표 영역입니다.
- 주택공급 공약 중 핵심인 “재개발·재건축(47만 호)” 관련, 윤 당선인은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규제를 대폭 완화한다는 입장이지만, 이는 법률(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이 따라야 실현 가능한 공약으로 분류됩니다. 반면 여당은 지난 2018년 1월부터 재시행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도에 대해 유지 입장을 밝히고 있어 대선 후보 간에도 이견이 확연한 대표 공약 중 하나였습니다. 1주택 장기보유자 감면 역시 법률 개정이 필요한 공약입니다.
- 다만, 부담금 부과 기준 금액 상향 공약의 경우 시행령 개정으로 추진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구조안정성 가중치 하향 등의 공약은 시행 규칙 혹은 고시 개정만으로 추진 가능한 공약에 해당됩니다.
- 도심복합개발 혁신지구 제도 도입(20만 호) 공약은 새로운 제도 도입을 위한 법률 개정이 필요하며, 142만 호로 가장 공급규모가 큰 ‘역세권 콤팩트시티’ 추진 공약 역시 법률 근거가 선행되어야 할 공약으로 분류됩니다.
- 이외에 미활용 국공유지 복합 개발(18만 호) 공약의 경우 용도폐지, 주거지구지정, 택지개발이라는 3단계의 행정 행위로 추진이 가능하며, 기반시설 설치 및 용적률 상향 인센티브(10만 호) 공약 역시 별도 법 개정 없이 시행령 이하의 개정으로 도입이 가능할 것으로 분석됩니다.
- 또한, 부동산 개발 관련 인허가권 상당수가 지자체 단체장에게 위임된 경우가 많다는 점, 많은 지자체가 산하에 도시개발 관련 공공기관(예: SH 서울주택도시공사, 경기주택도시공사)을 두고 있어 직접 사업시행자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앙정부 단독 의지가 아닌 지자체와 공동으로 추진되어야 할 사업 및 정책이 많다는 점도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 ② 부동산 세제

- 공시가격을 2020년 수준으로 환원하고 공시가격 현실화 추진계획 재수립
  - 관련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인하함으로써 부동산공시가격을 2020년 수준으로 환원
  - 지자체에 공시가격 검증센터를 설치해 중앙정부의 공시가격을 상호검증하고 향후 공시가격 현실화 추진계획을 재수립
- 종부세·취득세 개편,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등을 통해 부동산 세부담 완화
  - 종합부동산세는 재산세와 장기적으로 통합을 추진하고 1주택자 세율을 문재인 정부 출범 이전 수준으로 인하
    - ※ 세 부담 증가율 상한선을 ▲1주택자·비조정지역 2주택자 150%→50% ▲조정지역 2주택자·3주택자·법인 300%→200% 등으로 인하
  - 1주택 장기보유자의 납부 이연을 허용하고 보유주택 호수에 따른 차등 과세를 가액 기준 과세로 전환
  - 현행 1~3%인 취득세율을 단일화하거나 세율 적용 구간을 단순화하여 1주택자의 원활한 주거 이동을 보장. 조정지역 2주택 이상에 대한 누진 과세 완화
  -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율 적용을 최대 2년간 한시적으로 배제하고 부동산세제의 종합개편 과정에서 다주택자 중과세 정책 재검토

### ▶ 당선인의 관련 comment

분야	세부 내용
종부세·재산세 개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u>종부세를 폐지한다는 소리가 아니다. 재산세와 합쳐서 과세해야 하고 또 차입으로 집을 갖고 있는 분들에게는 순자산을 갖고 기준을 마련해야지 <b>빚내서 집을 갖고 있는 분들에게 일률적으로 세금을 내라는 것은 합리적으로 바뀌어야 한다</b></u>(2022.2.21,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1차 법정토론)</li> </ul>
공시가격 현실화, 양도세 부담 완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민의 <u>급격한 보유세 부담 증가를 해소하고, 양도소득세 세율을 인하해 기존 주택의 거래를 촉진하고 가격 안정을 유도하려고 한다. <b>공시가격 인상 속도를 낮춰</b></u> 보유세가 급증하는 것을 막겠다. <b>1세대 1주택</b></li> </ul>

## ▶ 당선인의 관련 comment

분야	세부 내용
	자에 대한 서울도 인하하고 장기보유 고령층 1세대 1주택자에 대해서는 매각하거나 상속할 때까지 납부를 유예하는 제도의 도입을 고려하겠다(2021.11.14, 페이스북)

## ▶ 이재명 후보의 공통공약

구분	세부 내용
부동산 세제 개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부세] 1주택 장기보유 저소득층·노인가구는 중부세 납부를 연기하고 상속에 의한 다주택자는 일정기간동안 1주택자로 간주</li> <li>- 이직·취학에 따른 일시적 2주택자를 구제하고 종종 명의 가택과 고향집은 다주택자 합산에서 제외</li> <li>▪ [양도세] 다주택자 양도세를 1년간 한시적으로 완화하고 유예기간 내 매도 시 종과세 면제 또는 단계적 완화</li> <li>▪ [취득세] 최고세율 3% 부과 기준을 현행 9억원→12억원으로 조정하고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의 취득세 50% 감면 혜택 기준 변경(수도권 4억원, 지방 3억원 이하)</li> </ul>

## ▶ 시사점 및 업계 영향

- 공시가격의 2020년 수준 환원 공약은 시행령 이하 개정만으로 바로 추진 가능합니다.
- 지자체에 공시가격 검증센터 설립은 사실상 추진이 불가능한 정책으로 보입니다. 지자체가 산정한 공시가격이 실효성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법적 근거가 필요하며, 만약 법 근거 없이 형식적인 수준의 검증센터 설립으로 추진될 경우, 아무런 법적 구속력이 없는 유명무실한 정책 공약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공시가격은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 이해관계가 서로 확연히 달라 사실상 추진이 쉽지 않은 공약으로 분류됩니다.
- 종합부동산세를 폐지하고 재산세와 통합하는 보유세 개편은 법령 개정이 반드시 필요한 만큼, 여소야대 국회 구조 상 단기 내 실현 가능성은 낮습니다. 다만, 양당 모두 1주택자에 대한 중부세 부담 완화를 공통공약으로 내세웠다는 점에서 현행 세제의 보완 가능성은 높아 보입니다.
- 다주택자 양도세 종과 완화, 취득세율 단일화 및 누진 과세 완화 등으로 인해 단기적으로 주택 매매거래가 활성화 될 수 있습니다.

③ 대출규제 / 외국인 투기 규제

○ LTV 규제의 합리적 개편과 청년·신혼부부 내 집 마련 금융지원 강화

- 생애 최초 주택구매 가구의 LTV 상한을 80%로 높이고 생애 최초 주택구매 가구가 아닌 경우 지역과 관계없이 LTV 상한을 70%로 단일화(다주택자는 보유주택 수에 따라 30~40%로 차등화)
- 신혼부부 4억원 한도에서 3년간 저리 금융지원(출산 시 5년까지 연장)
- 일정 소득 이하 청년층에 대한 임차보증금을 최대 2억원, 2년 간 저리 지원

○ 비거주 외국인 주택거래 허가제 도입으로 외국인 주택 투기 방지

- 또한 외국인 주택거래 자금출처 조사를 내국인과 동일하게 적용하여 탈세를 방지하고, 외국인의 투기성 부동산 취득에 대응하기 위해 보유현황에 대한 조사 및 데이터 구축

▶ 당선인의 관련 comment

분야	세부 내용
LTV, DTI 규제 완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DSR하고 DTI는 수치 제시를 안했다. 공약에서는 LTV만 80%를 했다. 그러나 거기에 맞춰서 <b>DSR, DTI도 결국은 금융권에서 이걸 부실채권으로 볼거냐 아니냐의 마지노선에 관한 것</b>(2022.2.3, 지상파 방송3사 주최 TV토론회)</li> <li>▪ 대출 규제 결과 주택 실수요자들은 자금줄이 막히고 현금 부자만 부동산 쇼핑을 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b>상환 능력이 있는데 왜 획일적인 대출 규제로 억울한 피해를 보아야 하나</b>(2021.12.2, 페이스북)</li> </ul>

▶ 이재명 후보의 공통공약

구분	세부 내용
LTV·DSR 규제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에 대해 LTV 최대 90%까지 인정</li> <li>▪ 청년 미래소득을 고려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추진</li> </ul>
외국인 투기 규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외국인 토지·주택 거래허가제 전국 확대(경기도 시행 제도 확대 적용)</li> </ul>

## ▶ 시사점 및 업계 영향

- LTV 규제 개편은 전형적인 행정지도 사항으로, 금융위원장 고시 변경으로 용이하게 추진이 가능합니다. 윤 당선인이 지난 2월 3일 대선 후보 첫 TV 토론에서 대통령에 당선되면 가장 먼저 손 볼 부동산 정책으로 대출 규제 완화 및 임대차 3법 개정을 뽑았다는 점에서 LTV 규제 개편은 최우선 부동산 정책 사항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여당(이재명 전 후보) 역시 실수요 주택은 금융 제한을 완화해 쉽게 돈을 빌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정년 및 생애 첫 주택 구입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비율(LTV)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완화를 공약으로 내건 만큼 여야 공통 공약에 해당합니다.
- 비거주 외국인 주택거래 허가제 도입 공약과 관련하여, 허가제 도입은 법률 개정 사항에 해당하지만, 여당 후보도 외국인 택지거래 허가제를 공약으로 밝힌 바 있어 공통 공약으로 분류됩니다.
- 최근 외국인의 국내 토지·아파트 취득이 급증하고 있는 만큼 외국인 부동산거래를 감시·규제하기 위한 정책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다만, 외국인 주택·토지거래 허가제의 전면 도입은 국제법상 상호주의 위반 소지가 있는 만큼 신중하게 검토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 일부 지역에 국한하거나 체류 자격 종류에 따른 차등 규제가 도입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 시사점 및 업계 영향

- 등록임대사업자 지원제도 공약의 경우 시행령 개정으로 추진이 가능합니다. 문 정부는 정권 초기인 2017년 임대사업자의 건강보험료 최대 80% 감면 등 세제혜택을 통해 우대 정책으로 시작했지만, 세제 혜택을 줄이며 규제로 방향을 선회한 바 있습니다. 윤 당선인의 공약은 현 정부 정책을 다시 뒤집고 원점으로 돌리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임대차 3법의 경우 윤 당선인 조차 "임대차 3법 전면 폐지는 시장에 혼란을 가져와 시장에 혼란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도를 수정해야 한다"는 유보적인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또한, 임대차 3법의 개정 역시 법률 개정 사항으로 당선인과 정부의 추진 의지와 상관 없이 실현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는 않은 공약으로 분류됩니다.
- 공공택지의 민간임대주택 배정 공약은 배정 자체보다 분양할 때 민간사업 시행자(건설사)의 수익을 어떻게 보장해줄 것인지가 실제 정책 이행 과정에서 핵심 포인트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과거에는 국민주택기금을 통해 땅값을 낮은 이자율의 자금으로 매입하고, 건설 비용도 상대적으로 낮았던 데다 의무 임대기간 후 해당 임차인은 분양가 규제가 없는 시가 분양을 통해 수익을 실현(부영, 호반건설 등)했지만, 현재는 분양가 규제 등으로 사업자에게 인기가 없는 사업 구조입니다. 따라서 민간 사업자가 수용 가능한 이익을 보장하는 어떤 조건을 제시하느냐가 중요하며, 이 영역이 업계의 이슈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① 규제혁파 및 기업환경 개선

#### ○ 규제개혁 전담기구 통한 규제혁신으로 기업투자 활성화

- (모빌리티) 모빌리티 서비스 산업의 법적근거 마련 및 규제혁파, 해외 수출 지원. 드론 UAM 등 새로운 배송 및 운송 수단 발전 속도 가속화
- (헬스케어/비대면) 개인의료데이터 및 디지털 헬스케어 서비스를 관리할 '디지털 헬스케어 주상담의' 제도 도입. 도서·산간 지역 및 소외계층 대상의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확대
- 국내복귀기업(유턴기업)에 대한 세액 감면 요건 완화 및 보조금 확대

#### ○ 기업 경제 관련 법령상 특수관계인 제도 운영의 합리적 개선

- 친족 범위의 합리적 조정
- 경제적 공동 관계가 없음이 증명된 경우 예외 인정 등

#### ○ 선진 경영권 방어 수단 도입

- 벤처기업에 대한 복수의결권 제도 도입

#### ○ 국가 R&D 정책 설계 개편

- 국가 장기 연구사업 제도 등을 도입하여 10년 이상 국가적 장기 연구 사업의 계속 추진
- 국가 과학기술위원회에서 정부 R&D 총괄 컨트롤타워 역할 담당

#### ○ 과감한 조세 금융 지원을 통해 민간 투자 증가 유도

- 조세지원, 금융지원의 확대 시행과 출연지원의 민간 매칭 확대
- R&D와 신기술제품 시장진입에 대한 규제의 과감한 철폐로 민간혁신활동 유인

## ▶ 당선인의 관련 comment

분야	세부 내용
규제개혁 전담기구 통한 규제혁신으로 기업투자 활성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u>규제영향분석 전담기구를 만들어 일자리 창출에 방해되는 규제는 과감히 혁파하여 기업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창의와 혁신을 유도</u>하겠다 (2021.9.7, 체인지 대한민국 3대약속-국민보고회)</li> <li>▪ 기본적으로 국가에서 법률로 정해놓은 형식의 사업 이외의 사업을 하지 못하게 막아놨다. <u>국민의 안전과 관계되는 게 아니라면 철저하게 네거티브 규제로 제도를 바꾸겠다.</u> (2021.12.16, 대한상공회의소 방문)</li> <li>▪ 지역별 특성화가 가능하도록 법을 개정하고, 지역별 산업 특성화가 가능하도록 <u>지역별로 관련 산업규제를 철폐하겠습니다.</u> (2021.11.18, D포럼 기조연설)</li> <li>▪ 비대면 진료는 피할 수 없는 흐름, 차기정부를 맡게되면 <u>비대면의료 혜택을 국민 모두가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u> (2021.12.2, 스타트업 정책토크)</li> </ul>
선진 경영권 방어 수단 도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고민해야 한다. <u>복수의결권 제도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생각한다</u> (2022.1.28, 차기 대통령의 대한민국 디지털 혁신방향 간담회)</li> </ul>

## ▶ 이재명 후보의 공통공약

구분	세부 내용
블록체인, NFT, P2E, 메타버스 산업 규제 완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NFT와 P2E 게임을 무조건 규제하는 것이 아니라 안될 것을 미리 정한 후 나머지는 자유롭게 풀어주고 사후 규제로 대응 추진</li> </ul>

## ▶ 시사점 및 업계 영향

- 드론, UAM 등 새로운 모빌리티 운송수단 도입 공약의 경우 특별법 제정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비대면 의료 확대 공약도 특별법 제정 혹은 기존 의료법 개정을 통한 법률 근거가 필요한 정책에 해당합니다.
- 법령상 특수관계인 제도 개선 공약은 법률 개정 사항이지만, 여당의 반대가 심한 상황입니다.
- 벤처기업에 대한 복수의결권 제도 도입은 상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으로 보입니다.
- 국가 R&D 정책 설계 개편 공약 관련, 현재 하나의 자문기관 성격인 국가 과학기술위원회가 정부 R&D 총괄 컨트롤타워를 담당하기 위해서는 법적 근거가 필요합니다.

## ② 자본시장 선진화

### ○ 개인 투자자에 대한 세제 지원 강화

- 주식양도세 폐지 및 증권거래세 적정 수준으로 유지

### ○ 주식물적분할 요건 강화 및 주주 보호대책 제도화

- 분할 자회사 상장 엄격 제한, 신사업을 분할하여 별도 회사로 상장하는 경우 모회사 주주에 신주인수권 부여하는 방안 등 관련 규정 정비
- 자회사 공모주 청약 시 원래 모회사 주주에게 일정 비율을 공모가로 청약하는 방식으로 신주인수권 부여 가능

### ○ 주식 상장폐지의 요건 정비 및 상장폐지 과정의 단계적 관리 체계 확대

- 상장 지속성이 존재함에도 전격 상장 폐지 않도록 요건 강화 및 세분화(관리종목 지정, 장외거래소 이관) 등
- 분할 자회사 상장 엄격 제한, 신사업을 분할하여 별도 회사로 상장하는 경우 모회사 주주에 신주인수권 부여하는 방안 등 관련 규정 정비

### ○ 내부자의 무제한 지분 매도 제한

- 내부자들이 아무런 제한 없이 대량으로 장내 매도하여 일반주주가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관련 제도 개선
- 무제한 장내 매도(시간외 매도)를 특정기간 내 일정한도로 제한
- 주식지분을 사고 팔아 경영권이 바뀔 때 피인수 기업 주주에게 주식매수청구권 부여하는 방안을 마련해 지배주주에게만 고가의 경영권 프리미엄을 지급하는 관행 재검토

### ○ 불법 공매도 근절 및 공매도 운영의 합리적 제도 개선

- 주식 공매도 감시 전담 조직 설치 및 불법 공매도 엄정 처벌(주가조작에 준하는 형사처벌)
- 기관 및 외국인에 비해 높은 개인투자자 담보비율 등을 합리적으로 조정

- 추가하락 과도할 경우 자동으로 공매도가 금지되는 공매도 서킷브레이크 도입 적극 검토

○ 자본시장 투명성과 공정성 획기적 개선

- 회계와 공시의 투명성 제고, 자본시장 투명성의 기초를 확립
- 미공개 정보이용, 주가조작 등 증권범죄의 수사 및 처벌에 이르는 전 과정 개편하여 제재의 실효성 강화

▶ 당선인의 관련 comment	
분야	세부 내용
개인 투자자 세제 지원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증권거래세는 새로운 금융과세제도가 생긴다고 하니까 있을 필요가 없다고 했지만 우리나라 증권시장이 워낙 좋지 않아서 <b>당분간 양도세를 폐지하고 증권거래세는 현행으로 돌린다.</b> “재벌 기업 대주주들이 자식에게 이전하거나 누구에게 증여할 때는 상속·증여세법에 따라 세금을 제대로 물릴 수 있다. 대만은 주식양도세를 실시했다가 주가가 폭락해 경제 장관이 경질되기도 했다. (주식양도소득세 폐지) 개미 투자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것 (2022.2.3, 대선후보 TV토론회)</li> </ul>
주식물적분할 요건 강화 및 주주 보호 대책 제도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b>앞으로는 신사업을 분할해 별도 회사로 상장하는 경우 기존 주주에게 신주인수권을 부여하는 등 선량한 투자자를 보호하는 제도를 마련하겠다</b> (2021.12.27, 자본시장 공정회복 정책공약 발표회견)</li> <li>“<b>분할 자회사 상장을 제한하고, 상장시 주식을 모회사 주주에게 배정하는 방안 등 보호대책을 확실히 세우겠다</b> (2022.2.14, 자본시장 육성과 투자자 보호에 대한 추가 공약 발표)</li> </ul>
주식상장폐지 요건 정비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b>수익성 등 상장 지속성이 있음에도 전격 상장폐지 되지 않도록, 요건을 강화하고 단계를 더 세분화하여 관리종목 지정, 장외거래소로 이관 등 상장폐지 전단계 관리체계를 확대할 계획</b> (2022.2.14, 자본시장 육성과 투자자 보호에 대한 추가 공약 발표)</li> </ul>
내부자의 무제한 지분 매도 제한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스톡옵션 행사로 취득한 주식 또는 테마주 등의 이유로 단기간에 급등한 주식을 경영진들이 대량으로 일시에 매도해 주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b>무제한으로 허용된 장내 매도의 기간과 한도를 제한하겠다.</b> 주식 지분을 사고 팔아 경영권이 바뀔 때에도 피인수 기업 주주에게 주식매수청구권을 부여해 <b>지배주주에게만 고가의 경영권 프리미엄이 지급되는 관행도 개선</b>하겠다 (2021.12.27, 자본시장 공정회복 정책공약 발표회견)</li> </ul>

▶ 당선인의 관련 comment	
분야	세부 내용
불법 공매도 근절 및 공매도 운영의 합리적 제도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개인 투자자가 외국인 및 기관 투자자에 비해 불리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 <u>기관에 비해 과도한 담보 비율 등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주식 대주제도도 개선</u>하겠다. 주가가 과도하게 하락할 경우 자동적으로 공매도가 금지되는 '공매도 서킷브레이크' 도입을 검토하겠다 (2021.12.27, 자본시장 공정회복 정책공약 발표회견)</li> <li><u>주식 공매도 감시 전담 조직을 설치하고 불법 공매도를 엄정하게 처벌</u>하겠다. 무차입 공매도 여부를 매일 실시간 점검하고, 불법 공매도 적발시 주가조작에 준하는 형사처벌을 할 방침 (2022.2.14, 자본시장 육성과 투자자 보호에 대한 추가 공약 발표)</li> </ul>
자본시장 투명성과 공정성 획기적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u>회계와 공시의 투명성을 높이고 미공개 정보이용, 주가조작 같은 증권 범죄의 수사 및 처벌에 이르는 전 과정을 개편</u>해 더 이상 투자자들이 억울한 피해를 당하지 않게 하겠다 (2021.12.27, 자본시장 공정회복 정책공약 발표회견)</li> </ul>

▶ 이재명 후보의 공통공약	
구분	세부 내용
자본시장 불공정 해소 및 개인투자자 보호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개인과 외국인투자자간 공매도 차입기간 차별 금지(불법 공매도 모니터링 및 처벌 강화)</li> </ul>
기업 분할·합병 과정에서 소액주주 권한을 강화하고 기업의 준법경영 유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인적분할 시 자사주 의결권 부활을 금지하고 물적분할 시 모회사와 자회사의 동시 상장 금지 또는 모회사 주주에 매수청구권 부여를 검토</li> </ul>

- ▶ 시사점 및 업계 영향
- 주식양도세 폐지 등 자본시장 선진화 관련 주요 공약은 상법 혹은 자본시장법 개정 사항에 해당됩니다. 시행령, 시행규칙, 고시에 위임되어 있는 제도(주식 상장폐지 요건 등)도 혼재되어 있는 만큼 법률 개정을 통한 법적 근거가 필요한 공약과 실현 가능성이 높은 공약을 구분해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 물적분할 반대하는 소액주주들에게 반대매수권을 청구권을 부여하는 제도와, 신설 자회사 기업 공개 시 모 회사 주주에게 보유주식 수에 비례에 우선배정하는 내용은 자본시장법 시행령과 금융투자협회 규정 변경 만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실현 가능성이 높습니다.
  - 개인 투자자에 대한 세제 지원의 경우 그 자체로 기업에 미치는 영향은 없으나, 주식 시장에 대한 유동성 공급 증가 효과를 불러올 것으로 예측되며, 이에 소액 주주 보호에 대한 문제가 불거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 ③ 중소·벤처기업 육성

#### ○ 중소·벤처기업 지원 방안

- (혁신성장 프로그램)중소·벤처기업 지원사업을 종합 평가하여 '혁신성장 프로그램'으로 개편. 중소 벤처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성장시 3년 유예기간의 확대 적용. 정부지원 역할 강화, 실리콘 밸리형 모델 활용
- (성장사다리) 중소·벤처스타트업의 성장사다리 구축 강화. 자금조달을 위해 스케일업 맞춤형 금융지원 및 R&D 지원 대폭 확대. 맞춤형 혁신 인력제도 도입해 신산업 진출 지원 강화
- (금융 지원 강화) 중소기업 금융 지원 강화를 위해, 무역금융 보증 지원 확대, 수출채권 현금화 보증기간 연장 등으로 수출 기업 보호 신사업 진출에 필요한 추가 여신 적극 지원
- (가업승계 지원) 중소기업 가업승계 지원을 위해, 사후관리 의무기간, 사후요건 등을 완화. 계획적 승계 지원을 위한 사전 증여제도 개선
- 벤처기업의 주식매수청구권(스톡옵션)행사 시 비과세 한도 향상. 코스닥 상장기업에도 행사이익 과세특례 적용하여 벤처기업의 상장 유인
- 중소기업 공급망 정보제공 및 컨설팅 지원을 위한 통합 거버넌스 구축
- 향후 5년간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책 마련을 위해 중소기업 생산성 특별법 제정, 경쟁력 강화 정책 추진.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위원회 설치. 구조조정 대비 산업구조 전환 지원 관련 제도 마련
- 모태펀드 규모 확대를 통한 혁신기업의 창업과 성장 지원. 민간투자주도형 기술창업지원(TIPS) 확대를 통한 딥테크 스타트업 육성

#### ○ 중견기업의 세제 지원 강화, 중견기업 도약 지원 펀드 설치

#### ○ 중소·벤처기업의 ESG 역량 강화 및 적용 확대를 위한 대응시스템 구축

- 민간 합동 컨트롤타워 설치, 로드맵 마련, 부처별 정책 효율적 추진
- ESG평가지표의 표준화 추진, ESG지표를 활용해 맞춤형 지원 강화

▶ 당선인의 관련 comment

분야	세부 내용
중소·벤처기업 지원 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하청업체에 대해 지나치게 상세한 원가자료나 기술 자료를 요구하는 행위를 근절하겠다. 이러한 <b>공정거래 질서의 확립을 통해 기업의 성장 사다리를 더욱 확대</b>하겠다. <b>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연구개발 투자를 확대</b>하겠다. (2022.2.14,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 중소기업 정책비전 발표회)</li> <li>▪ 기업의 <b>연구개발 투자에 대한 세제와 금융 지원을 획기적으로 확대하고, 신산업에 진출하는 중소기업의 성공을 적극적으로 돕기 위해 신산업 전용 저금리 장기금융 지원제를 도입</b>하겠다 (2022.2.14,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 중소기업 정책비전 발표회)</li> <li>▪ <b>가업상속공제제도의 사전 및 사후 요건(관리 기간 및 업종요건 등)을 비교대상 선진국 수준으로 완화하고, 사전증여제도를 개선</b>해, 중소기업이 계획성 있는 승계작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받쳐주기로 했다. (2022.2.14,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 중소기업 정책비전 발표회)</li> <li>▪ <b>스톡옵션 행사시 비과세한도 현행 3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올리겠다</b></li> <li>▪ <b>창업초기 정부 지원과 민간 투자의 활성화를 위해 모태펀드 규모를 2배 확대</b>하겠다 (2021.12.26, 성장·복지·일자리 정책 공약 발표 회견)</li> </ul>
중소 벤처기업의 ESG 역량 강화 및 적용 확대를 위한 대응시스템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연구개발 투자를 비롯해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탄소중립 역량 강화를 위한 세제, 금융, 컨설팅과 기술지원도 확대</b>하겠다" (2022.2.14,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 중소기업 정책비전 발표회)</li> </ul>

▶ 이재명 후보의 공통공약

분야	세부 내용
중소·벤처기업 지원 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5년간 모태펀드 신규예산을 2배 확대(1조원→2조원)하고 벤처펀드 출자 시 세제지원 확대, 국민참여형 벤처투자펀드의 배당소득에 대한 저율 분리과세 적용</li> </ul>

▶ 시사점 및 업계 영향

- 현재 대기업에 치중되어 있는 ESG 문제가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에도 전반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됩니다.

#### ④ 주요 산업별 육성 정책

##### ○ [반도체] 반도체 초강대국 추진

- 차세대 반도체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인프라 지원 및 시스템 정비

##### ○ [해운·조선] 해운 조선산업 성장 지원

- 우수 선화주 인증제 활성화
- 친환경선박의 생산 수주 확대 및 연구개발 지원

##### ○ [항공·우주] 항공·우주산업 투자

- 부처별로 흩어져 있는 우주 정책을 총괄할 컨트롤 타워인 '항공우주청' 설립
- 위성 자력 발사와 위성 및 행성 탐사를 위한 고성능 발사체 추진

##### ○ [게임] 불공정 문제 해소 및 적극 지원

- 확률형 아이템 정보를 완전 공개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게임사에 시청자위원회와 같은 게임이용자권익보호기구를 설치하며 국민이 직접 확률형 아이템 정보를 확인하는 공정 감시시스템 도입
- 게임 소액 사기 전담 수사기구 설치

#### ▶ 당선인의 관련 comment

분야	세부 내용
해운 조선산업 성장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친환경적이고 안전한 해양수산업을 육성하겠다. 유통이력추적제 정착화 등을 통해 수산업 안전 관리 대폭 강화하겠다. 안전수산물 인증 체계를 마련하고, 전국 위판장 방사능 전수조사 실시와 함께 수산가공기업 검사장비 기자재도 지원하겠다.. <u>탄소 배출이 적은 친환경 선박 등 고부가가치 선박의 연구 개발과 생산 또한 국가가 나서야 하는 상황이며, 자율운항선박 도입, 스마트항만개발운영 등 해운항만 분야 패러다임 변화에 발맞춘 신규 비즈니스 모델 창출이 국가의 적극적 지원을 필요로 하는 분야</u> (2022.1.15, 신해양강국 비전선포식)</li> </ul>
게임 불공정 문제 해소 및 적극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지금까지 게임 이용자에게 가해졌던 불공정 문제를 완전히 해소하겠다. 공정거래를 위해 상품 내용을 소비자에게 정확히 알려줄 의무가</li> </ul>



▶ 당선인의 관련 comment

분야	세부 내용
	<p>있다. <u>일정 규모의 게임사에 게임물이용자권익보호위원회를 설치해 게임업계의 투명성을 강화</u>하겠다. 어떤 상품들도 공정거래를 위해서는 그 상품의 내용에 대해서 소비자에게 정확하게 알려줘야 할 의무가 있다. 제품의 내용을 정확히 표시하도록 의무화하는 것만으로도 소비자 보호에 상당한 기여를 한다. 허위 표시에 대한 제재는 좀 더 구체적으로 법을 운영해 나가면서 수위 정도를 정해놓고 대통령령으로 구체화시켜 조치하면 될 것 같다. 게임 소액사기가 급증하고 있다. 소액사건이라 경찰에 신고를 해도 절차가 복잡하고 사건도 오래 걸려서 많은 피해자들이 고통을 겪고 있다. <u>경찰청에 온라인 소액사기 전담기구를 설립해서 소액사기 행위를 완전히 근절시키겠다</u> (2022.1.13, 게임업계 불공정 해소)</p>

▶ 이재명 후보의 공통공약

분야	세부 내용
친환경선박 전환 지원 및 한국형 선박 조세리스제도 도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5조원 이상의 금융지원을 통한 친환경 고효율 선박 발주 및 컨테이너 박스 확보를 지원하고 자율운항선박사업 클러스터 구축</li> <li>우수선화주 인증 제도를 부정기 선화주까지 확대하고 공제혜택을 강화</li> </ul>
항공 우주산업 투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2030년까지 3톤급 정지궤도 위성을 우리 기술로 발사할 수 있는 발사체 개발 지원</li> <li>민군협력으로 인공위성 구성품 핵심기술의 국산화를 촉진. 발사체, 발사 인프라, 우주정거장 등으로 구성된 종합적인 우주개발 인프라 구축</li> </ul>
게임 불공정 문제 해소 및 적극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확률형 아이템의 정확한 구성확률과 기댓값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کم 플리트 가차' 금지</li> </ul>

▶ 시사점 및 업계 영향

- 과거 정치권은 게임 주제에 대해 학부모 표를 의식해 언급을 자제하면서, 이번 대선을 통해 처음 공약 사항으로 등장하였습니다. 본 공약은 게임 문화에 익숙한 20-30대 남성 유권자 표심을 염두에 둔 공약 성격이 강해 보입니다.
- 과거 게임 관련 이슈가 있을 때마다 많은 국회의원들이 관련 정책을 내놓았지만, 실질적으로 진행된 경우는 거의 없다는 점에서 이번 공약도 일회성으로 끝날 수 있다는 우려감도 존재합니다.





### ▶ 시사점 및 업계 영향

이전을 유도하는 정책이 유의미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 메가빌딩 건설이 일반화되면 건설사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되나, 주변 건물들의 공실률이 상승할 수 있습니다.
- 농촌의 디지털 혁신 및 탄소중립 이행 기술개발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 농촌진흥청이 농식품 분야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정하고 탄소중립에 활용할 수 있도록 데이터 플랫폼을 2027년까지 구축하는 과제를 수행 중입니다.



**▶ 당선인의 관련 comment**

	피해를 보고, 플랫폼 기업이 지대추구를 해서는 안 된다 (2022.1.28, '차기 대통령 디지털혁신 방향성' 간담회)
--	--

**▶ 이재명 후보의 공통공약**

분야	세부 내용
디지털 기술의 산업현장 활용도 제고 및 산업 디지털 전환 선도사업 추진	▪ 산업 현장의 공정혁신, 제품·서비스 개발, 신 비즈니스 모델 발굴을 추진하고 산업데이터, AI 플랫폼, 디지털 전환 제품, 시스템 인증 체계 구축
인공지능·데이터 생태계 핵심기반인 'AI 반도체' 산업 육성 및 데이터 활용 기반 조성	▪ 공공데이터 및 민·관이 함께 투자한 AI학습용 데이터를 전면 개방하고 데이터 접근성 강화를 위해 통합데이터포털 설치·활용

**▶ 시사점 및 업계 영향**

- 윤석열 당선자는 영세 상공인들에게 적용되는 간편결제 수수료 부담을 최소화하겠다고 여러 번 밝힌 반면, 네이버 카카오 등 플랫폼 업체는 이에 반발하고 있어 향후 간편결제 업계 이슈로 부상할 수 있습니다.

## ② 디지털 자산

- **코인 투자 수익 5,000만원까지 비과세**
  - 현재 250만원인 코인 양도차익 기본 공제를 주식(5000만원)과 동일한 수준으로 향상. 과세 시점 역시 선 정비 후 과세 원칙을 밝힘(현재 정부는 가상자산 소득 과세 시점을 2023년 1월부터로 유예한 상황)
-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
  - 코인 부당거래 수익, 사법절차를 통해 전액 환수
  - 해킹, 시스템 오류 발생 대비 보험제도 도입·확대
  - 디지털자산거래계좌와 은행을 연계시키는 전문금융기관 육성

○ **국내 코인발행(ICO) 허용**

- 코인 발행 전면채택은 다단계 사기 등 투자자 피해가 발생 가능하므로 우선 안전장치가 마련된 거래소발행(IEO) 방식부터 시작

○ **NFT 활성화를 통한 신개념 디지털 자산시장 육성**

- 다양한 블록체인 기반의 기술 개발 지원 및 제도적 기반을 선제적으로 구축
- 가상자산사업 정책을 총괄할 디지털산업진흥청 설립

○ **소프트웨어 산업 육성**

- 소프트웨어 개발자에게 공정하고 정당한 보상, 불공정한 관행 혁파
- 공공IT구매사업 규모 2배 확대, 정부 발주 소프트웨어 연구개발 과제 대폭 확대
- 초중등 교육 과정 내 소프트웨어 교육 확대

○ **고도의 디지털 인프라 구축**

- 빅데이터, 블록체인 융합 5G·6G 지능형 초연결망(DX-Superway)등 인프라 구축. 6G 기술 선점 및 동북아 스마트 에너지그리드망 구축, 5대 메가테크 육성(바이오헬스, 항공우주, 탄소중립, 양자, AI반도체·로봇)
- 민간 클라우드 퍼스트 정책으로 공공분야에 민간 클라우드 우선 이용
- 클라우드 컴퓨팅 연구개발 투자 기업에 법인세 공제 등
- 사이버 안전망 강화

○ **메타버스 선도국가**

- 메타버스 기술 혁신을 위한 법제화 추진
- 대학 내 메타버스 유관 학과에 특별정원을 배정하는 등 메타버스 유관산업 10만명의 인력 양성

▶ 당선인의 관련 comment

분야	세부 내용
코인투자수익 5000만원까지 비과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젊은이들이 안심하고 새로운 시장에 도전할 수 있도록 주식시장에 준하는 안심 투자 환경을 조성하고 시장 질서를 흐리는 행위에 엄정하게 대응하겠다. <b>코인 수익 5000만원까지 완전 비과세로 하겠다. 현행 250만원인 코인 양도차익 기본공제를 주식과 동일하게 상향하겠다.</b> (2022.1.19, 국민의힘 당사 기자회견)</li> </ul>
소프트웨어 산업 육성 / 고도의 디지털 인프라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데이터를 분석 활용 전달하는 AI 분야가 발전할 수 있도록 <b>소프트웨어 개발자들에 대한 정당한 보상체계를 설계해야 한다. 정부가 민간 클라우드를 먼저 사용하는 방식으로 민간 클라우드 산업을 육성</b>해야 한다 (2022.2.7, 대한상의 대선후보 초청 특별 강연)</li> </ul>

▶ 이재명 후보의 공통공약

분야	세부 내용
가상자산 법제화, 공시제도 투명화를 통한 투자자 보호 및 과세 합리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상자산을 제도적으로 인정하여 다양한 사업기회를 보장하고 객관적 상장 기준 마련, 공시제도 투명화 등을 추진</li> <li>▪ 가상자산 투자수익 5천만원까지 비과세, 가상자산 손실 5년간 이월공제 등 과세 합리화</li> </ul>
가상자산 공개제도 (ICO) 허용 및 증권형 가상자산 발행·공개(STO)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ICO는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고 투자자 보호 및 시장 교란 방지를 위한 충분한 안전장치를 마련한 후 허용</li> <li>▪ 혁신적인 가상자산의 발행과 투자자 보호, 중소벤처기업의 새로운 투자 유치 방식으로 증권형 토큰 발행을 허용</li> </ul>
X+AI로 융합산업 활성화 및 AIoT·클라우드 서비스 활성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규모 AI학습 데이터를 활용해 X+AI 신규 유망 서비스 발굴 및 지원을 강화하고 관련 스타트업 지원 확대</li> <li>▪ 정부·공공서비스 등의 공공 클라우드를 국내 민간 클라우드로 전환하기 위한 적극행정 추진</li> </ul>
블록체인, NFT(대체 불가능한 토큰), P2E(돈버는 게임), 메타버스 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 완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NFT와 P2E 게임을 무조건 규제하는 것이 아니라 안될 것을 미리 정한 후 나머지는 자유롭게 풀어주고 사후 규제로 대응 추진</li> <li>▪ 주요 권역별 '메타버스 허브' 확대 구축 및 메타버스 아카데미 운영 : 메타버스 허브를 통해 지역 특화산업, 산학연고 연계 강화를 통한 지역 특화 메타버스 新서비스 개발 및 확산</li> </ul>
4차 산업혁명의 핵심 인프라 기술 지원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6G 핵심기술 확보를 위한 선도적 R&amp;D 투자 및 6G 국제표준 주도로 글로벌 장비·단말기 시장 선점 기반 마련</li> </ul>



▶ 시사점 및 업계 영향

- 윤 당선인 코인(가상화폐) 관련 공약은 투자수익 비과세 범위(5000만원) 확대, 거래 연계 계좌 확대 등 투자자 중심 정책으로 그 동안의 부정적 인식에서 벗어나 산업 진흥을 목적으로 가상자산에 친화적인 현실성이 있는 개선책을 제시했다는 것이 중론입니다.
- ICO/IEO 활성화 정책에 따라 가상화폐가 제도권으로 수용될 경우 관련 규제 또한 강화될 것입니다. 정부 정책으로 신규 가상화폐 거래소의 시장 진출이 활발해지겠지만, 한편으로는 규제 회피 수단으로 분산원장금융(DeFi) 등 대체재가 부상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 “가상자산 진흥”이라는 측면에서 여야 공통 공약에 해당하며, 허용된 사업만 가능한 포지티브 규제가 아닌, 법률로 금지된 것이 아니면 모두 허용하는 네거티브형 규제라는 정책 방향성에서도 공통 분모가 상당히 존재합니다.
- 윤 당선인은 공약만으로 볼 때 가상자산 시장 생태계 구성에 있어 정부의 일정 부분만 통제력을 발휘하겠다는 입장으로 보입니다.

### ③ 플랫폼 정책

- **상생형 지역유통발전기금 도입 추진으로 온라인 플랫폼과 지역상권의 Win-Win 달성**
  - 온라인 유통의 발달에 따른 오프라인 지역상권의 개편 및 발전을 위해 온오프라인 상생형 기금의 일정기간 자율출연을 유도하고 온라인 진입규제는 완화 및 유예 추진
  - 참여업체로 구성된 위원회는 해당 지자체와 협력하여 기금을 지역내 오프라인 상권조정 및 활성화 사업지원, 배송기사 및 이용사업자 지원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유도
- **플랫폼 자율규제기구를 수립하여 플랫폼의 사회적 역할 증진 및 상생 촉진**
  - 플랫폼의 다양성과 역동성을 감안하여 선부른 규제도입은 지양하되 주요 플랫폼, 소비자 단체, 이용 소상공인 등 이해관계자를 포함한 연합적 논의기구 및 자율규제 틀을 설립 추진
  - 민간 자율기구 또는 민관 공동기구 형태로 추진하고, 실효성 담보를 위해 목표 설정, 거버넌스 등 제도적 기반마련 과정에는 정부가 적극 참여
- **플랫폼 내 자율분쟁조정위원회 설치 유도를 통해 이용사업자의 권리 보호**
  - 플랫폼 스스로 이용사업자의 불만 및 분쟁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자율분쟁조정위원회 설립 및 운영 유도

#### ▶ 당선인의 관련 comment

분야	세부 내용
상생형 지역유통발전기금 도입 추진으로 온라인 플랫폼과 지역상권의 Win-Win 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택시 플랫폼 업체가 이익의 엄청난 부분을 수수료로 받는 건 대단히 불합리하고 국민 상식에 맞지 않는다. 정부가 재정으로 출자하는 플랫폼을 구축하고 국민께 많이 홍보해 개선할 수 있도록 하겠다. (2022.2.8, 택시업계 간담회)</li> </ul>
플랫폼 자율규제기구를 수립하여 플랫폼의 사회적 역할 증진 및 상생 촉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플랫폼은 혁신의 하나로서 사회 전체가 발전하는데 리더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이 기본적인 입장. <b>플랫폼의 독과점으로 인해 플랫폼을 이용하는 사람과 일감을 받는 사람이 부당하게 피해를 보고 플랫폼 기업이 지대추구를 해서는 안 된다.</b> 플랫폼으로 인해 발생하는 독과점 문제나 노동의 문제에 대해서는 문제점들을 직시해서 해</li> </ul>

## ▶ 당선인의 관련 comment

분야	세부 내용
	결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한다. (2022.1.28, 벤처·ICT 혁신 전략 토론회 직후 기자들과 문답)

## ▶ 이재명 후보의 공통공약

분야	세부 내용
온라인 플랫폼 공정거래 입법 추진 및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온라인 플랫폼 공정거래 환경 마련을 위한 법률을 추진하고 플랫폼 입점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단체결성권과 협상권 보장</li> <li>온라인 플랫폼 부과 수수료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플랫폼 수수료 적정성 점검으로 소상공인 부담을 완화</li> </ul>

## ▶ 시사점 및 업계 영향

- 윤 당선인은 공약집에서 "플랫폼의 다양성 및 역동성을 감안해 선부른 규제 도입은 지양해야 한다"고 밝히며 3가지 플랫폼경제 공약을 제시하였습니다. 3가지 공약의 공통적인 지향점은 "자율규제"로 강도높은 입법을 통해 플랫폼을 규제하려는 여당의 정책기조와 차별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 하지만 윤 당선인은 대선이 다가오면서 소상공인 표심을 의식해 플랫폼 기업의 과도한 수수료 폭리를 규제해야 한다며 공공 택시앱 출시, 네이버/카카오 등 빅테크의 간편결제 수수료 최소화 등을 언급하면서 이전과 결이 다른 발언을 내놓았다는 점이 변수입니다.
- 또한 대선 결과와 관계없이 온플법 입법 의지가 강한 여당이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을 통해 입법을 강행하려는 움직임도 있습니다.

## ① 탈원전 정책 폐기(復원전 정책)

- 탈원전 정책을 폐기하고 신한울 3·4호기 건설 즉시 재개, 원전산업 생태계 활성화 및 세계 최고 원전 기술력 복원
  - 안전성 평가를 토대로 2030년 이전 최초 운영허가 만료 원전의 계속 운전 등으로 국가온실감축목표(NDC) 40% 달성에 기여
  - 원전을 기저전원으로 활용하여 원자력 발전 비중을 합리적으로 유지하고 원자력을 신재생에너지와 함께 탄소중립 추진의 주요 동력으로 활용
  - 과학기술과 데이터를 바탕으로 국민의견을 수렴해 NDC 이행계획, 단계별 적정 에너지 믹스 수립 및 추진
- 원자력 안전이용 기반 강화 및 한·미 원자력동맹 강화
  - 원자력안전위원회 전문성, 독립성 보장을 통한 원자력 안전이용 기반 강화
  - 범정부 원전수출지원단 운영
  - 한미간 원전수출 협력을 위해 '한미원자력고위급위원회' 활성화
- 원자력, 배터리, 태양광, 수소 기술분야 Global Top 3 수준으로 집중 육성
  - 수소에너지 기술, 배터리 신기술, 수송용 발전용 연료전지 기술, 차세대 태양광 기술 개발 적극지원
  - 디지털 기반 에너지 신산업, 소재·부품·장비 분야와 협업해 혁신기업 육성
  - 디지털시대에 맞는 AI와 에너지 융합 육성

## ▶ 당선인의 관련 comment

분야	세부 내용
탈원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탈원전·태양광 비리를 조사하고 전기요금 인상 계획을 전면 백지화하겠다 (2022.1.13, 기자회견)</li> <li>▪ 현 정부가 재생에너지에 대한 과도한 의존으로 에너지 수급이 불안해지고 온실가스 저감이 어려워진 것은 물론, 세계 최고수준이던 원전 생태</li> </ul>

## ▶ 당선인의 관련 comment

분야	세부 내용
	<p>계까지 큰 타격을 입혔다. 대한민국의 미래에 꼭 필요한 장기연구과제를 설정하고, 이 과제들은 정권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 (2022.2.8, 대선후보 초청 과학기술 정책 토론회)</p> <p>▪ <b>원전이 한국 산업에 필수적인 존재이다. 우리나라는 세계 어느나라보다도 값싼 전기 때문에 수출 경쟁력이 생겨서 먹고 살았다.</b> 박정희 대통령 때 월성원전부터 시작한 원전 산업으로 우리 모든 산업이 수출 경쟁력을 갖게 됐다. 태양광이나 풍력으로 값싼 전기 공급할 수 있는가? <b>탈원전으로 경남 원전 산업 생태계 257개 기업이 도산했다. 도대체 누구를 위한 것인가?</b> (2022.2.19, 창원 유세)</p>

## ▶ 시사점 및 업계 영향

- 신한울 3/4호기 건설 즉시 재개 등 탈원전 정책폐기 정책 대부분은 원자력안전에 관한 업무를 수행을 관장하는 원자력안전위원회의 허가 및 승인 사항으로 정책 계획 수립, 이행 프로세스 진행 등 행정 운영에 해당됩니다. 원자력 발전 비중 역시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 기본계획의 정책사항에 해당돼 법 개정 없이 신 정부에서 바로 추진 가능한 대표적인 공약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 특히 원전 이슈는 윤 당선인이 검찰총장 사퇴와 그 이후 정치에 참여한 계기가 월성원전 사건(2018년 청와대와 정부가 월성원전 1호기의 경제성 평가를 조작하는 방법으로 부당하게 조기 폐쇄를 끌어냈다는 것이 핵심 내용)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여러 차례 언급한 바 있어 탈원전 정책 폐기는 원전 사건 수사와 맞물려 속도감있게 진행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한미 원자력동맹 강화 공약은 법 제도보다 외교력이 더 중요한 영역이며, 배터리, 태양광, 수소 관련 법 제도는 거의 완비된 상태로, 실제 신 정부가 정책적으로 어떤 계획과 일정을 세워 실행할지 여부가 더욱 포인트로 보입니다.

## ② 탄소중립 및 기후위기대응

### ○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전면 수정

- 국제사회에 약속한 2030년 감축목표는 준수, 현실성 있는 실천계획으로 공론화 논의를 거쳐 확정할 방침
- 온실가스 배출권 유상할당을 확대하고 탄소세 도입은 신중하게 추진

### ○ 탈탄소 산업구조로의 전환

- 임기내 석탄 등 화석연료 발전 비중 40%대로 감축
- 내연기관 자동차 신규등록을 2035년 금지하고 4등급 이하 노후경유차 폐차 3년 앞당길 방침

### ○ 탄소저감 R&D 및 투자 확대 등 기후위기 대응 지원 강화

- 산학계 및 정부의 '기후위기 대책기구' 구성
- 탄소중립을 위한 지속가능한 산림자원 육성 및 빅데이터 기반 선제적 산림재난 관리시스템 구축

### ○ 중소·벤처기업의 ESG 역량 강화 및 적용 확대를 위한 대응 시스템 구축

- ESG 평가지표의 표준화를 통해 기업 현황 평가, 금융 및 세제지원, 경영 및 법률 컨설팅 등 맞춤형 지원 강화
- 대·중소·벤처기업의 ESG 경영역량과 공동사업 프로그램 촉진

### ○ 쓰레기 처리방식 열분해 전환 및 플라스틱 사용 제한 등 폐기물 처리방식 전면 전환

#### ▶ 당선인의 관련 comment

분야	세부 내용
탄소중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우리가 탄소에너지를 덜 쓰면 되는 문제가 아니고, 결국은 탄소 배출이 안되는 에너지로 전환을 하고 그 에너지의 효율을 고도화해야 하기 때문에, 결국은 과학기술 역량의 제고를 의미한다. <b>(2030년 탄소 배출량 감축 목표는) 과학계, 산업계와 논의해 로드맵을 정하고 수치를 결정해</b></li> </ul>

## ▶ 당선인의 관련 comment

분야	세부 내용
	<u>야 한다. 정치가 아니라 과학이 결정할 일이다.</u> (2022.2.8, 대선후보 초청 과학기술 정책 토론회)

## ▶ 시사점 및 업계 영향

-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수정은 법률 개정이 필요 없는 정책 추진의 문제에 해당하는 반면, 온실가스 배출권 유상할당 확대와 탄소세 도입은 법률과 시행령 사항이 혼용되어 있습니다.
- 내연기관 자동차 신규등록 금지 등의 공약은 국민 재산권과 소유권 침해가 예상돼 법률 개정이 필요합니다.
- ESG 평가지표 표준화 공약의 경우, 현재도 금융감독원의 공시의무 등 행정지도 수준에서 이뤄지고 있는 만큼, 법률 도입보다 행정지도, 시행령 등을 통해 적용이 확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① 공정경쟁 환경 확립 및 양질의 일자리 창출

#### ○ 공정 경쟁 확립과 규제혁신, 안정적 국민경제 운용과 지역발전

- 디지털 전환과 지속가능한 에너지 기반 및 혁신인재 양성과 고용친화적 환경 구축

#### ○ 민간 혁신성장을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

- 중소·중견기업의 신산업 지출 적극지원, 글로벌 강소기업으로 역동적 혁신성장 뒷받침
- 글로벌 선도기업에 대한 맞춤형 포괄적 지원, 첨단산업 투자유치를 통한 성장 및 양질의 지역 일자리 창출

#### ○ 자영업자·플랫폼 노동자 관련 정책 개선을 통한 지원 강화

- 자영업자·플랫폼 노동자 대상 직업능력개발 기회 확대
- 현장 중심의 연계 통합 훈련프로그램, 창업준비 프로그램 도입

#### ○ 4차 산업 및 에너지 신산업 창출 및 관련 일자리 확대

- 반도체·배터리·비래차 산업에 대한 지원 강화와 더불어 해외 생산시설을 국내로 이전하는 기업에 세제 혜택을 주는 리쇼어링 정책 확대 전망
- 50조원+a 의 코마테크펀드(민관합동의 반도체기금) 조성과 지역별 산업 클러스터 육성

#### ▶ 이재명 후보의 공통공약

분야	세부 내용
플랫폼 종사자·특수 고용노동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프리랜서·특수고용노동자·플랫폼 종사자의 협동조합 설립과 지원확대를 통해 직업 안정과 역량 함양추진</li> </ul>



**② 고용혁신·노동이사제·최저임금**

- 디지털·저탄소 경제로의 전환에 앞서 기존 인력과 협력업체 종업원의 고용에 미치는 영향 사전평가 시스템 구축
  - 저숙련 취약 노동자들에게 피해가 집중되지 않도록 다양한 근로자 보호조치 선제적 실행
- 인공지능과 공공, 민간의 고용노동 빅데이터를 활용한 '차세대 디지털 고용 서비스 플랫폼' 구축으로 고용서비스 혁신
  - 디지털 기반의 고용서비스 혁신으로 스마트 일자리 매칭 확대
  - 구직자도약보장 패키지 및 기업도약보장 패키지 도입을 통해 구직자의 생애주기를 고려한 일자리 매칭 서비스와 중소기업 인재채용 지원
- 주52시간 근로제 탄력적 개편 예정
  - 스타트업 등을 연장근로시간 특례업종에 포함시키고 근로시간제의 정산기간을 현행 1~3개월에서 1년 이내로 확대함으로써 보다 탄력적인 근무형태 운영하게끔 할 방침
- 노동이사제 공공기관 우선 도입
  - 노동이사제는 공공기관에 우선 도입되는 방식으로 예정대로 추진되지만 노동계의 요구가 큰 민간기업 확대 적용은 힘들어질 전망
- 최저임금은 지역·업종별로 차이를 뒀서 유연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추진
  - 중소기업의 지급 여건을 고려해 최저임금을 지역별·업종별로 차등 적용하는 방침이 검토될 전망
  - 중소기업이 원자재 가격 인상에 피해를 일방적으로 부담하지 않고 제 값을 받을 수 있도록하는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도 예상

▶ 당선인의 관련 comment

분야	세부 내용
노동이사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본적으로 국민의 것인 공공기관은 사기업과 달리 정부가 인사권을 갖고 있어 도덕적 해이가 걱정될 수 있다. 공공기관 근로자들이 추천하는 분이 회사 사정에 대해 파악하고 감독하는 업무를 담당한다면 보다 공정하게 감독이 가능하지 않겠냐. <b>공공부문은 노동이사제 도입을 시도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b> (2022.1.11, 신년기자회견)</li> <li>▪ 노조에서 근로자들이 추천하는 것으로 정부입김으로 도덕적해이가 많다. 해수원에 노동이사제 있었다면 쉽게 문닫지 않았을 것이다. <b>국민이 주인인 공공기관부터 해볼 수 있지만 여기서 부작용 나타나면 지속되기 어려울 것이다.</b> 개혁을 위해선 근로자와 함께 가야 노동이사제가 긍정 역할 할 수 있다. (2022.2.3, TV토론회)</li> </ul>
최저임금/주52시간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최저임금 폐지나 52시간제 폐지를 이야기한 적도 없다.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은 노동기본권과 관련된 것은 하되 임금지급 문제와 관련한 규정은 열악하니 상황을 봐서 하자고 말씀드린것. (2월3일, TV토론회)</li> <li>▪ 최저시급제나 주 52시간제라고 하는 게 중소기업에서 창의적으로 일해야 하는, 단순기능직이 아닌 경우에 비현실적이고 기업 운영에 정말 지장이 많다는 말씀을 들었다. 대체적으로 중소기업 경영 현실을 모르고 탁상공론으로 만든 제도 때문에 힘들다고 (말한 것으로) 받아들였다. 차기 정부를 맡게 되면 정책 대상자에게 물어보지 않고 마음대로 하는 것은 확실히 지양하고 비현실적인 제도는 철폐해 나가도록 하겠다. (2021.11.30, 2차전지 강소기업 방문)</li> </ul>

▶ 시사점 및 업계 영향

- 공공기관 이사회에 노동자 대표를 참여시키도록 하는 법안-공공기관 운영법 개정안(노동이사제법)-은 지난 1월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법 적용 대상은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으로 중앙정부가 공공기관 예산을 통제하는 지배구조, 개별기업 중심으로 교섭하는 한국 노사관계의 특징 등을 감안하면 그 파급력에 한계는 있어 보입니다. 또한 이미 존재하는 회사의 노조 대표 및 노사협의회 대표와 역할과 기능이 중첩된다는 점도 노동이사의 역할을 제한시키는 요소입니다. 노동이사제는 민간영역으로 전파될 수 있는 전염성이 큰 이슈로 기업 입장에서는 향후 리스크로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당선인이 당선 직후 기자회견을 통해 “국정 운영의 원칙은 국가 주도가 아닌 민간 중심 경제로의 전환”이라고 강조한 만큼 기업의 노동이사제 도입 역시 강제 입법이 아닌, 경영 의사결정 자율성을 영역으로 맡겨질 가능성도 높습니다.
- 차기 정부는 강성 노조의 무단 사업장 점거와 폭력행사 등 불법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에 나설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이며, 공공부문에 노동이사제를 우선 적용 및 도입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노사간 갈등·분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시사점 및 업계 영향

- 주52시간제 및 최저임금제의 탄력적 운용을 위해 업계 상황을 수렴한 후 제도 개편에 나설 것으로 보이며, 기업들은 수정된 기준을 내규에 반영할 필요가 있습니다.
- 신재생에너지를 비롯해 첨단산업 관련 일자리에 대한 지원이 대폭 확대될 것으로 보여 '국가 첨단전략산업법' 등 첨단산업 관련 지원 정책에 대한 이슈 발생이 전망됩니다.

### ③ 산업안전

#### ○ 산업재해 취약부문에 대한 산업재해 예방 강화

- 산업안전에 국민관심이 높아졌으나 산업재해는 여전히 높은 수준으로, 산업재해 취약 부문에 대한 예방 강화를 통해 노동계와 경영계의 우려에 대비책 마련

구분	공약 세부 내용
산재 예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산업재해 취약부문 산재예방에 행정역량 집중</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규모 사업장, 건설현장 등 산재 취약사업장에 대한 산재예방 기술 및 예산 집중 지원</li> <li>- 대기업의 기술과 노하우를 활용, 하청업체의 안전수준을 높이는 대·중소기업 상생형 산업안전보건체계 구축·지원 강화</li> <li>- 지방고용노동청,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민간컨설팅기관의 산재 예방을 위한 기술지원 및 컨설팅 역량 강화</li> </ul> </li> </ul>
新 예방기술 도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4차 산업혁명 기술을 산재 예방에 적극 활용하도록 지원 강화</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예) 택배노동자의 근골격계 부상 예방을 위해 웨어러블 기기 등을 활용한 업무방식 전환</li> </ul> </li> </ul>

#### ○ 부실시공 근절, 안전한 건설 현장 조성

- 광주광역시 건축물 붕괴사고 등 건설업계에 ʘ빈번히 발생하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건설공사의 특수성에 맞는 안전한 제도정비와 건설사고의 위험성을 낮출 필요가 있음

구분	공약 세부 내용
안전관리체계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건설공사 안전관리체계의 혁신적 개선</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발주자, 설계자, 시공자, 감리자, 근로자 등 건설사업 참여자별 안전관리 책임 및 역할분담 강화</li> <li>- 발주자와 사업주의 적정 공사비(안전관리비) 확보 및 충분한 공사 기간 보장, 안전기술 개발 및 보급 등 안전한 공사 여건 마련</li> <li>- 감리자의 감리권과 공사 중지권 보장</li> <li>- 불법하도급, 부실감리, 행정당국 승인 없는 무단 시공, 공법의 무단 변경, 불량 자재 사용, 채용 강요 등 공사방해 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로 공사의 품질과 안전확보</li> </ul> </li> </ul>
건설사 산재 발생률 산정 대상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대규모 건설공사에서 원도급사가 안전관리 역량이 우수한 하도급사 선정 시 참고하여 반영할 수 있도록 산재발생률 대상을 확대</b></li> </ul>

## ▶ 당선인의 관련 comment

분야	세부 내용
중대재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u>중대재해처벌법이란 것도 지금 구성요건을 보면 약간 애매하게 돼 있다. 형사 기소를 했을 때 여러 가지 법적 문제가 나올 수 있다.</u> (2022.3.2, TV토론회)</li> <li>▪ 5인 미만 사업장에 확대나, 책임 범위 확대 등 추가 제도개선방안 <u>논의는 산업 및 노동시장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현행 중대재해법 시행이 정착된 이후에 충분히 준비를 갖추 수 있는 여건을 고려해 결정하는 것이 현실적일 것이다. 영세사업장의 현실을 무시하고 과속으로 법 적용을 하면 오히려 일자리가 절실한 저임금근로자들의 일자리를 빼앗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u> (2022.2.11, TV토론회)</li> </ul>

## ▶ 이재명 후보의 공통공약

분야	세부 내용
산업안전보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산업안전보건 감독강화 및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위촉 등 노동자의 안전 보건 감독 참여 확대</li> </ul>

## ▶ 시사점 및 업계 영향

- 윤 당선인의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 “기업인들의 경영 의지를 위축시키는 법”이라는 시각이 매우 강하며, 이는 수차례 언급을 통해 확인된 바 있습니다.
- 또한, 중대재해처벌법이 없더라도, 형법상 업무상 과실치사상죄 하나만 있어도 수사를 제대로 하면 엄중한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입장이어서 법의 보완(개정)보다는 수사를 통한 법 집행 수위 조절 방법을 선택할 것으로 보입니다.
- 여대야소 국회로 인해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은 사실상 쉽지 않은 상황에서, 법을 폐기하거나 개정하지 않더라도 수사와 적용 수위를 합리적으로 조절하는 방법을 통해 사실상 법 개정 효과를 내는 방향이 현실성 있는 대안으로 보입니다.

## ① 법원

## ○ 통합가정법원, 해사전문법원 설치

- 통합가정법원이 소년보호사건(현재 가정법원 관할), 소년형사사건(현재 일반법원 관할)을 포함해 아동·가족 관련 사건을 통합처리
- 해사전문법원은 해사전문가 법관으로 구성하고 해상사건, 일반 해사민사사건, 해사형사사건, 해사행정사건, 해사중재, 국제해사사건 등을 처리

## ○ 통합행정심판원 창설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조세심판원, 소청심사위원회 등을 통합
- 행정심판 조정제도를 활성화하고, 국민고충처리의 법적 근거 확립

## ▶ 당선인의 관련 comment

분야	세부 내용
통합가정법원, 해사전문법원 설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민 맞춤형 전문 재판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가정법원을 통합가정법원으로 개편하고 해사전문법원을 설치하겠다. (2022.2.14,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 사법 정책공약 발표)</li> </ul>
통합행정심판원 창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행정심판 인공지능(AI) 디지털 플랫폼을 만들어 원스톱으로 행정구제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다. (2022.2.14,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 사법 정책공약 발표)</li> </ul>

## ▶ 이재명 후보의 공통공약

분야	세부 내용
해사전문법원 설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해사사건 및 국제상사 분쟁을 전담하는 법원 도입을 검토</li> </ul>



## ▶ 시사점 및 업계 영향

- 검찰 관련 공약은 각각 검찰청법(제8조), 공수처법 개정이 필요해 실제 이행까지 적지 않은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공수처의 독점적 지위 규정을 폐지한다는 공약은 공수처법상 “공수처의 범죄수사와 중복되는 다른 수사기관의 범죄수사에 대해 공수처장이 이첩을 요청하는 경우 해당 수사기관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1항)” 등을 수정해야 합니다. 민주당이 20대 국회에서 소수정당에 연동형 비례대표제라는 유인책까지 제시하며 통과시킨 법을 무력화시키는데 협조할 가능성은 상당히 낮아 보입니다. 따라서, 법 개정보다 행정기관 운영을 컨트롤하는 방식으로 유사 효과를 내는 방향으로 추진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립니다.



① 정부조직개편

○ 대통령실을 슬림화하고 전략조직으로 개편

- 대통령실 '정예화한 참모'와 '분야별 민·관합동 위원회'로 조직개편
- 수석비서관, 민정수석실, 제2부속실을 폐지하고 인원 30% 감축
- 세종 제2집무실 설치. 청와대 해체. 대통령실을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 이전

○ 여성가족부를 폐지하고 다양한 사회적 문제에 대응하는 별도 부처 신설

○ 디지털 경제 지원을 위해 대통령 직속 민관 과학기술위원회, 정부 디지털 규제 철폐 전담기구를 신설

- 민관 과학기술위가 연구자, 개발자, 기업현장전문가, 과학기술행정가 등으로 구성되어 국가 과학기술 전략 로드맵을 수립하고 진척 상황을 대통령이 챙김
- 규제개혁 전담기구가 기업투자 활성화 및 중소·중견 기업의 신사업 진출을 지원

○ 3년 내 디지털 플랫폼 정부를 구성하고 수출가능한 행정용 AI 시스템 개발

- 스타트업 및 기업과 협업해 독자적 OS를 개발
- 공교육, 행정, 국방 분야에 AI 적극 도입
- 국가보안정보를 제외한 공공업무에 민간 클라우드 우선 적용
- AI를 활용해 공공(국정원), 군(국방부), 민간(과기부)의 사이버 대응 체계 일원화

▶ 당선인의 관련 comment

분야	세부 내용
대통령실 조직개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내각의 자율성을 억압하는 대통령실의 조직을 개편해서 각계 각층의 전문가들이 미래를 선도하는 국정 컨트롤 타워로 탈바꿈 시키겠다" (2022.3.3, KBS/TV조선 방송연설)</li> </ul>
여성가족부 폐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여성가족부 폐지는 저의 핵심 공약이 맞다" (2022.2.15, 페이스북)</li> </ul>
디지털플랫폼 정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마이AI포털'을 도입해 1인 1집사, AI 집사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다. 몰라</li> </ul>

## ▶ 당선인의 관련 comment

분야	세부 내용
	서 복지 혜택을 놓치는 일이나 관공서 여러 군데를 다니느라 속 터지는 일은 없도록 하겠다. 청년창업 스타트업 및 기업과의 협업을 통해 디지털 플랫폼 정부를 운용할 독자적 운용 시스템(OS)을 개발하겠다. 국민 민원을 처리하는 디지털 민원 해결 센터를 설립하고 이에 투입될 디지털 문제 해결 도우미 인력 1만 명을 양성하겠다" (2022.1.2,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 정책공약 발표)

## ▶ 이재명 후보의 공통공약

분야	세부 내용
디지털 플랫폼 정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부 데이터를 Machine Readable 형태로 공개</li> <li>▪ 국민의 정보접근권 보장과 정부투명성 위한 '정보공개법' 개정</li> </ul>

## ▶ 시사점 및 업계 영향

- 여성가족부 폐지는 정부조직법 개정 사항입니다.
- 윤 당선인과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 모두 과학 기술 거버넌스의 중요성을 수차례 강조한 만큼, 새 정부에서 과학기술 부처의 위상이 높아지고 관련 업계의 규제 철폐와 지원을 위한 정책이 적극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디지털플랫폼 정부 구성 관련 공약의 경우, 정부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법률적 뒷받침이 필요한 사항과 시행령 개정 만으로 추진 가능한 사항이 혼재되어 있습니다.
  - 디지털 플랫폼 정부 구성을 위해 소프트웨어, AI, 클라우드 산업의 기업들과 협업할 것을 공약한 만큼, 관련 정부과제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됩니다.

## ① 소상공인·자영업자

## ○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코로나19 손실 보상 현실화

- 현행 손실보상금은 실질적인 손실보상이 아닌 위로금 성격으로 소액 피해지원금만 지급하고 있고 일부 대상자는 누락되는 문제점 발생
- 이에 소상공인이 현실적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고 보상 사각지대를 해소, 이를 위해 50조원 이상의 재정자금 확보

구분	공약 세부 내용
손실보상 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50조원 이상의 재정자금을 확보, 정당하고 온전한 손실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규제 강도와 피해 정도에 비례해 지원</li> <li>- 국세청과 지자체 보유 행정자료를 근거로 지원액 절반 먼저 지원하는 선보상 제도 시행</li> </ul> </li> </ul>
지원체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영세자영업자·소상공인의 긴급자금 수요에 대응하고, 사회 각 분야 재건을 위한 지원체계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5조원 이상의 특례보증을 통해 저리 대출 자금 확대</li> </ul> </li> <li>▪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의 회복과 유지를 위한 심리상담을 제공하고 디지털 치료제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디지털 건강모니터링기, 대화봇 등의 디지털 치료제도 실시</li> </ul> </li> </ul>
보상 사각지대 해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방역조치 기간 발생한 손실 및 폐업 소상공인 손실보상, 보상 사각지대 해소</li> </ul>

## ○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임대료를 임대인, 임차인, 국가가 나누어 분담하는 임대료 나눔제 도입

- 현 정부의 강력한 방역조치로 고사 위기에 놓인 소상공인·자영업자의 피해 복구 및 경영 안정화를 위한 현금지원 요구 수용
- 매출이 감소하여 임대료 및 전기료 등 고정비용과 세금 등의 연체와 부담이 누적되면서 폐업 발생과 위기 증가
- 임대료 나눔 프로젝트 및 세제지원을 통해 임차인의 경영 안정 지원 및 임대인의 손실 보상 추진

구분	공약 세부 내용
임대료 나눔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임대료를 임대인, 임차인, 국가가 1/3씩 나누어 부담, 특히 생계형 임대인을 제외한 임대인도 임대료의 1/3을 삭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임대인의 임대료 삭감의 나머지 손실분은 코로나19 종식 후 세액 공제 등의 형태로 국가가 전액 보전</li> </ul> </li> </ul>
세액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세금, 임대료, 공과금 부담 경감을 위한 자금지원 및 세제 지원 확대 (코로나19 종식 이후 2년까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영세 자영업자의 부가세·전기·수도요금 등 부담 한시적 50% 경감</li> <li>- 임대인의 임대료 인하분 한시적 전액 세액 공제</li> <li>- 소비자의 선결제 세액공제율을 한시적으로 확대</li> </ul> </li> </ul>

### ○ 위기의 관광업계 회복과 도약을 발판 제공

- 코로나19로 인해 관광업계 피해액은 약 16.6조원으로 추산되며, 일자리 약 8.4만개가 증발하여 이를 위한 고용창출 및 내수 촉진 필요

구분	공약 세부 내용
중소여행사 피해회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중소여행사 및 관광업계 피해회복 적극 지원</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감염병 등 재난 시 관광사업자의 재정 및 용자 신속 지원</li> <li>- 관광종사자 사회안전망 복지정책 마련과 관광사업자 폐업 및 재기 지원</li> <li>- 손실보상금 제외 업종인 여행업의 손실보상 적용 추진</li> </ul> </li> </ul>
IT기술의 접목 및 관련 인력 육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4차 산업혁명 기반의 관광산업 혁신</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류 관광객이 방문하는 주요 명소, 역사문화유산, 문화예술자원 등에 메타버스용 콘텐츠 랜드마크 조성</li> <li>- 지역별 특화 관광자원과 연계한 지역경제 활성화</li> </ul> </li> <li>▪ <b>문화관광분야 PD 및 기획자 육성</b></li> </ul>

### ▶ 당선인의 관련 comment

분야	세부 내용
코로나19 손실보상 현실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코로나가 진전이 안 되고 예를 들어 변종바이러스로 더 확대되는 추세라면 제가 지금 50조라고 하는거는 지난 8월기준으로 말씀을 드린 것이고, 아마 <b>재정이 더 투입돼야 할 가능성이 있다.</b> (2021.12.10, 강릉 청년소상공인 간담회)</li> <li>▪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은 방역이라는 공공정책에 의해 손실을 봤기 때문에 헌법상 손실보상의 개념으로 확실하고 신속하게 피해 보상을 해야 된다 (2022.2.21, TV토론회)</li> <li>▪ 영업시간 제한과 방역 패스를 완전히 철폐하고, 코로나로 인한 손실의</li> </ul>

## ▶ 당선인의 관련 comment

분야	세부 내용
	<p>실질적 보상을 약속드린다. 제가 대통령이 된다면 즉시 <b>기존 정부 안과 별개로 600만원을 추가해 최대 1000만원을 지원</b>하겠다. 특별한 희생을 한 소상공인, 자영업자 분들에게 실질적인 보상을 약속드린다.</p> <p>(2022.2.26, 페이스북)</p>
임대료 나눔제 도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임대료를 임대인, 임차인, 국가가 1/3씩 나누어 부담하는 '<b>임대료 나눔제</b>'를 도입하겠습니다. 생계형 임대인을 제외한 임대인도 고통 분담을 위해 임대료의 1/3을 삭감하고 그 중 20%는 세액공제로 정부가 돌려드릴 것입니다. 임대인의 임대료 삭감의 나머지 손실분은 코로나가 종식된 이후 세액공제 등의 형태로 전액 보전하겠습니다. 임차인은 남은 임대료 2/3에 대해 금융대출 이후 상환금액에서 임대료와 공과금에 대해 절반을 면제하겠습니다. 나머지 부담은 국가가 정부 재정을 통해 부담하겠습니다. (2022.1.11, 신년기자회견)</li> </ul>
관광업계 회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여행의 자유'를 되찾겠다. PCR 음성이 나온 백신접종자에게 굳이 1주일의 격리를 명하는 것은 비과학적이고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조치</li> </ul> <p>(2022.3.1, 페이스북)</p>

## ▶ 이재명 후보의 공통공약

분야	세부 내용
소상공인·자영업자 금융지원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폐업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직업훈련, 재취업/재창업 관련 교육, 재도전 특례보증 등 금융지원 확대</li> <li>▪ 정부의 방역조치 실시와 동시에 손실을 지원하는 사전보상 방식의 손실보상 제도로 개선</li> </ul>
임대료 분담제 도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감염병 등 재난에 의한 집합금지·영업제한이 실시될 경우 임대인, 임차인 그리고 정부가 임대료를 분담하는 제도 도입</li> </ul>

## ▶ 시사점 및 업계 영향

- 소상공인·자영업자 코로나19 손실보상이 현실화됩니다.
  - 법률 문제보다는 예산 문제가 쟁점입니다. 보상 대상은 정부가 선정하지만, 보상규모는 국회와 협의를 통해 예산 통과가 필수이기에, 민주당의 협조 여부가 관건입니다.
  - 재원 50조 원 이상 확보를 위해서는 추경이 현실적인 안이나, 거대 야당 체제에서 단기간 내에 추경 합의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어, 지원액 절반을 선보상하는 제도의 시행에 걸림돌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상 특례보증을 통한 저리 대출 자금이 확대됩니다.
  - 코로나19 이후 은행 대출 증가로 은행권의 NIM이 크게 증가하였는데, 본 정책이 시행될 경우 많은 사업자들이 대출을 신청할 것으로 예상되어, 은행의 NIM은 소폭 증가할 전망입니다.
  - 다만, 사회적 거리두기가 계속될 경우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부실이 지속되어 은행의 부실(여신이하)채권 비율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으므로, 본 정책은 사회적 거리두기의 획기적인 완화가 뒷받침되어야 할 것입니다.
- 법인 임대인도 임대료 나눔제 대상에 포함됨에 따라 임대료를 삭감 후 세액공제에 대비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 신정부에서 코로나19 종식을 언제 선언할 것인지는 미지수이나 임대료를 삭감한 임대인은 정부의 삭감액 보전 및 세액공제 정책에 대응해야 합니다.
  - 다만, 신정부의 세액공제에 전기요금도 포함되어 있어, 그간 적자가 지속되고 있는 한국전력의 기업가치에 악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 관광업계에 IT기술을 접목, 메타버스를 활용한 관광산업 혁신이 추진됩니다.
  - 국내 대형 여행업체인 하나투어, 모두투어 등은 코로나19 팬데믹 상황 타개를 위해 이미 메타버스를 활용한 관광상품을 출시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다만, 중소 여행사는 아직 디지털전환이 미흡하여 정부의 직접적인 지원대상이 될 수 있으며, 금번 공약이 실현될 경우 메타버스 내에서 대·중·소 여행사간 디지털 랜드마크 선점을 위한 경쟁이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구분	공약 세부 내용
	된 수가(정책수가)를 지급, 의사 및 전문간호사 등 핵심인력 이탈 방지, 유경험자 추가투입 - 국민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필수 의료인 중증외상센터, 분만실, 신생아실, 노인성 질환 치료 시설에도 국민건강권 확보 차원에서 공공정책수가 도입

**▶ 당선인의 관련 comment**

분야	세부 내용
코로나19 대응체계 개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취임을 하면 인수위부터 준비해 100일간 코로나 긴급 구조 프로그램에 착수하겠다. 100일 이내에 지역별·업종별 피해를 지수화하고, 영업제한 형태에 따라 등급화할 것 (2021.11.7, 연합뉴스 인터뷰)</li> </ul>
공공정책수가 적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금 병원을 더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과거 있다가 없어진 공공정책 수가 제도라는 것을 만들어놓으면 민간 병원도 더 공공성을 갖고 국민들의 건강에 기여할 수 있다. 공공정책 수가제도를 만들어 민간 병원이 더 공공의료에 봉사할 수 있도록 하고, 훌륭한 의료인의 양성을 위한 의과대학을 투트랙으로 해야 한다. 필요에 따라 공공병원도 필요하면 또 만들어야한다. 주체가 공공기관 전체에 맡기는 문제는 아니다. (2022.2.12, 전북 남원지역 유세)</li> </ul>

**▶ 시사점 및 업계 영향**

- 공공정책수가 도입을 위한 해외 의료 선진국 사례 벤치마킹 및 필수의료분야 선정을 위해 사회적 합의 도출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이와 더불어 비대면 진료 등을 육성하기 위해 관련 벤처기업을 집중 지원할 것을 밝힌 바 있어 향후 의료계의 반발이 예상됩니다.



### ③ 공정사회

#### ○ 시민단체의 공금 유용과 회계 부정 방지

- 기부문화 확산을 위해 가장 필요한 것으로 기부단체의 자금 운영 투명성이 거론되고 있어, 기부문화 확산을 위해 기부금 단체의 투명한 운영 필요
- 이를 위해 기부금 단체의 불투명·무책임한 회계처리에 대해 규제를 강화하고, 기부금이 단체의 목적에 맞게 지출되었는지 검증 필요

구분	공약 세부 내용
기부금 단체 회계 투명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기부금단체 국민참여 확인제도 도입으로 수입·지출 투명성 제고</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장·현금 모금도 즉석으로 영수증 발급 의무화</li> <li>- 기부금 수입 대국민 공개</li> <li>- 전용계좌 미사용 시 패널티 강화</li> <li>- 사업별·비목별 세부 지출내역을 기부금통합관리시스템에 공개하여 국민검증 강화</li> <li>- 성실신고 확인제를 도입하여 목적 내 지출, 적격지출 증빙 의무화</li> </ul> </li> <li>▪ <b>불투명·무책임한 회계처리에 대한 패널티 강화</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회계부정·자금유용 등 불성실한 자금 흐름이 확인된 단체에 대해 3년간 국세청 개별 검증 의무화</li> <li>- 기부금 투명성 강화 조치 위반 시 기부금 모금 제한, 과태료 부과 등 벌칙 강화</li> </ul> </li> </ul>

#### ○ 공정거래 관련 법 집행체계를 개선, 피해자 신속 구제

- 현행 분쟁조정제도가 개선되었음에도 피해자의 신속한 피해구제가 미흡하여 적절한 구제를 받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신속성과 전문성을 갖춘 체계적인 분쟁조정 시스템을 통해 실질적 피해구제 강화 필요

구분	공약 세부 내용
전속고발권 행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엄정하고 객관적인 전속고발권을 행사하되, 중소벤처기업부 등의 무고발요청제와 조화로운 운영 추진</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회적 파장이 큰 위법행위에 대한 엄정한 전속고발권 행사와 보완장치인 의무고발요청권 행사에 대한 객관적인 기준과 역할조정 필요</li> </ul> </li> </ul>
분쟁조정 및 중소기업 피해구제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대체적분쟁해결제(ADR) 활성화</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정거래 분쟁조정 통합법 제정 등 효율성, 전문성, 신속성 제고</li> </ul> </li> </ul>

구분	공약 세부 내용
	방안 추진 ▪ 중소기업 기술탈취 예방 및 피해구제를 위한 공정거래시스템 구축 - 사전 예방수단, 엄정한 법 집행 체계, 기술 탈취 구제 수단의 효율적 운영
플랫폼 규제	▪ 디지털플랫폼 경제의 불공정 행위 규제 및 소비자 권익 보호 - 플랫폼 분야 특유의 역동성 및 혁신이 저해되지 않도록 자율규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 시 최소 규제를

○ **납품단가 제도 개선으로 제값 받는 환경 조성**

- 최근 원자재 가격 인상, 탄소중립 정책으로 인한 원재료 가공 비용 증가 등으로 관련 중소기업의 경영난이 가중
- 상생협력법에 납품대금조정협약의제가 있으나, 요건이 복잡하고 대기업과의 거래 단절 우려로 실제 집행되는 사례가 많지 않아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구분	공약 세부 내용
중소기업 보호	▪ 원자재 가격추이, 하도급 거래관계 및 계약실태 자료 수집 ▪ 계약기간 중 원자재 가격이 일정 수준 이상 오를 경우 의무적으로 납품대금조정협약에 응하도록 관련 제도 개선 - 중소기업협동조합 또는 중소기업중앙회 등의 대협협상 활성화 ▪ 납품단가에 원자재 가격 변화를 자동 반영하는 납품단가 연동제도 도입 검토

▶ **당선인의 관련 comment**

분야	세부 내용
시민단체 부정방지	▪ 언젠가부터 일부 시민단체는 권력에 대한 감시와 견제라는 본연의 임무를 상실한 채 정치권력과 유착관계를 형성했다. 그 결과 정치권력은 시민단체를 세금으로 지원하고, 시민단체는 권력을 지지하는 부패카르텔이 만들어졌다. 시민단체의 불법이익을 전액 환수하겠다. 시민단체의 공금유용과 회계부정을 방지할 수 있는 '윤미향 방지법' 통과도 추진하겠다. (2022.3.1, 페이스북)
공정거래 관련 법 집행체계 개선	▪ 스타트업의 강소기업, 중견기업 나아가 대기업으로 성장을 위해서는 정부 지원책도 있지만, 공정거래시스템을 확실히 정립해줘야 한다. 공정한 환경이 조성되지 않으면 스타트업이 큰 기업으로 성장이 어렵다

## ▶ 당선인의 관련 comment

분야	세부 내용
	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 스타트업에는 혁신과 성장, 속도, 실패 등이 모두 담겨 있다. 정부도 기업 성장과 경제 성장을 위해 실패 리스크를 개인이 부담하지 않도록 지원해야 한다. (2021.12.2, 스타트업 정책 토크)
납품단가 제도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원청업체가 우월적 지위로 하청업체에 지나치게 상세한 원가 자료나 기술자료를 요구하는 행위는 엄중한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사안임을 감안, 공정거래 관행이 정착될 수 있도록 대통령으로서 직접 챙기겠다. (2022.2.15, 윤석열 대선후보 중소기업 정책비전 발표회)</li> </ul>

## ▶ 시사점 및 업계 영향

- 전속고발권 및 의무고발요청제 조정
  - 전속고발권 폐지는 문 정부에서도 추진된 바 있으나, 검찰개혁과 맞물려 검찰의 권한 확대 우려로 백지화된 바 있습니다.
  - 윤 당선인은 전속고발권의 엄정하고 객관적인 행사를 표면에 내세웠으나, 문 정부에 이어 다시 한번 폐지를 추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 다만, 거대 야당의 반대로 전속고발권 폐지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며, 대안으로 의무고발요청제를 적극 행사하는 방향으로 제도가 시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대체적분쟁해결제(ADR) 활성화 및 중소기업 기술유출 방지를 위한 특별법 제정이 가능합니다.
- 플랫폼 분야의 자율규제 원칙을 내세워 플랫폼 기업의 공정거래 관련 규제 강도를 현 정부 대비 낮출 것으로 기대됩니다.
  - 현재 플랫폼 기업의 규제 법안('온라인플랫폼공정화에관한법률')이 공정위 안과 방통위 안으로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데, 당선인의 '최소 규제' 기조가 반영되어 여야 의견을 조율한 후 수정안으로 통과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중소기업 납품단가 연동제가 시행되면 원자재 가격 변동성에 따른 중소기업의 부담이 줄어들고, 반대로 대기업에는 비용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원자재 가격 하락 시 납품단가가 오히려 떨어질 수 있어, 단순한 연동제를 보완할 대체 제도가 필요합니다.

■ 올촌 웨비나 참여 Professionals

주제	발표자	연락처	
		Tel. (02-528-)	e-mail
금융 및 디지털 신산업	김시목 변호사	5764	smkim@yulchon.com
	윤종욱 변호사	5648	jwyoons@yulchon.com
	허진용 변호사	5285	gyheo@yulchon.com
	김익현 변호사	5702	ihkim@yulchon.com
디지털경제에서의 공정경쟁	한승혁 변호사	5633	shhan@yulchon.com
ICT, 미디어, 콘텐츠	손도일 변호사	5836	dison@yulchon.com
	구민승 변호사	5550	mksu@yulchon.com
환경·에너지	손금주 변호사	5094	kjson@yulchon.com
	윤용희 변호사	5284	yhyoon@yulchon.com
	김홍 변호사	5053	hkim@yulchon.com
부동산 개발 및 세제	이강만 변호사	5405	kmanlee@yulchon.com
	장재형 세무사	5392	jhjang@yulchon.com
노동/중대재해	박재우 변호사	5682	parkjw@yulchon.com